

한국과 독일의 통일교육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 교육에의 시사점 탐색

Exploring Implications for Korean Educatio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Unification Education between Korea and Germany

김용기

한서대학교 교양교육원

Yong-Ki Kim(nova365@naver.com)

요약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한국과 똑같은 분단국가에서 통일을 이룩한 독일 통일교육을 통해 한국통일교육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독일은 통일교육을 정치교육이라고 명칭한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통일교육을 포함하여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민족 간 연대교육을 포함한다. 또한 학교 통일교육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정당들도 정치교육을 다루고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연방정부차원에서 큰 틀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주정부와 여러 단체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주지역의 특색과 정당, 시민단체의 색깔에 맞춰 적합내용을 담은 정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물론 연방정부는 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국민들은 거리감 없이 자연스럽게 정치교육을 수용하고 발전해 나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은 많다. 첫째, 통일교육의 체계적인 시스템이다. 한국은 통일부와 통일교육원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지자체, 종교단체, 교육지자체를 종합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성 인정 내에서의 통합'이다. 한국도 독일처럼 국가는 큰 틀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것은 여러 기관과 시민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통일교육의 통합교육전환이다. 독일은 통일교육을 정치교육이라고 하여 포괄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다. 우리도 단순한 통일교육이 아닌 포괄적인 통합교육으로 전환하여 내용을 충원하여, 앞으로 다가올 통일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독일통일 | 통일교육 | 정치교육 |

Abstract

This research aimed at suggesting the implication of Korean unification education based on German unification education, which country achieved unification from the divided country as Korea. Germany named unification education as the political education. German political education includes democratic citizen education, peace education, and solidarity education between the peoples. Also, besides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civic organization and parties treat political education. German political education is conducted by being shared with role by main government and several organizations, when the federal government level suggests a big frame. Also, political education with proper content could be conducted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 of main area and the color of the party and civic organizations. Of course, federal government supports administrative·financial support enough on this. In such situation, German people have naturally accepted and developed political education without distance. This situation has lots of implication on Korea. First, systematic system of unification education. In Korea, unification education is conducted mainly by Ministry of Unification and Education Center for Unification. However, in order to naturally approach the people, systematic system synthesizing civic organization, local government, religious organization, and educational local government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integration within acknowledgement of diversity'. In Korea, also, diversity should be acknowledged by being suggested by the country with the big frame, and the detailed parts by various institutions and civic organizations as Germany. Third, conversion to integrated education of unification education. Germany is conducting comprehensive education naming unification education as the political education. We also should prepare for coming unification in the near future by complementing the content by converting the mere unification education to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education.

■ keyword : | German Unification | Unification Education | Political Education |

접수일자 : 2017년 02월 14일

수정일자 : 2017년 03월 06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3월 17일

교신저자 : 김용기, e-mail : nova365@naver.com

I. 서론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는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통일교육은 건국 이래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집권 정부의 통일관에 따라서 통일교육이 ‘반공교육’, ‘이념교육’, ‘안보교육’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어왔다. 김대중정부 이후 통일교육은 과거 정부의 통일교육과 다른 접근 방식을 보였다. 무조건적인 주입식 반공교육이 아닌 대북 포용정책인 햇볕 정책에 입각하여 냉전 사고를 탈피한 민주시민교육, 북한 주민의 동포 의식, 북한 원조의 필요성, 남북교류(금강산 관광, 무역 등)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이 과거 정부와 달랐다. 또한 과거 일시적이고, 일률적인 통일교육을 학교와 사회교육기관, 민간단체 중심으로 통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당위성 및 정당성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견해차로 보수와 진보의 생각이 다르고, 계층·세대·지역 간의 견해차로 통일에 대한 갈등현상 또한 빚어져 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접근 방식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정당성내지 당위성마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 특히 통일 이후 이 나라의 주축이 되어 이끌어 나갈 청소년이나 젊은 세대의 무관심과 비판론은 심각한 현상이다. 일단 이런 현상은 남한의 경제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북한 문제와 남북대화를 통한 약속이 실천되지 않는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우리의 통일교육이 입시위주 중심의 학교교육에서 제대로 설 수 없고, 대학에서는 제대로 된 학과가 별로 없어 통일교육에 대한 체계성과 기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초·중등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제대로 된 과목이 없고, 대학

연구는 2016년 6월 기준,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등재 학술지 및 등재 후보 학술지 총 2,175개 학술지에서 통일, 북한이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학회는 8개뿐이다. 그러나 독일은 통일을 대비하여 자유, 평화, 민족애의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학문적 연구를 구체적으로 준비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통일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독일 통일교육을 중심으로 한국 통일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을 둔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의 상황과 유사한 통일 전 서독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II. 한국 통일교육 정책의 기초와 관리체계

1. 통일교육 기초

통일교육의 기초는 헌법 제4조와 교육기본법 제2조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토대로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되었고,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은 자유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 의식 속에서 바른 안보관을 통한 민족 통일 의지 함양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의 통일교육 목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북한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이를 토대로 건전한 안보관을 토대로 통일을 이루는데 목표가 있다. 이와 같은 통일교육의 목표에 근거하여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1].

첫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하여 민주 시민의식 고취와 갈등의 평화적 해결 능력을 함양한다. 둘째, 통일교육은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민족공동체 의식 제고와 균형 있는 대북관 정립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2. 통일교육 관리 체계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 제1항에는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

1 통일부(2014). 통일교육지침서 참조.

하여야 한다.” 또 제2항에는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통일교육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통일교육이 개인적 당파적이지 아니기 위하여 우리정부는 정부주도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통일교육에 대한 정책 기획·수립, 각 급 학교 및 공공 기관, 사회교육기관에 관련된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1999년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러한 정부 역할이 법적으로 타당성 및 정당성을 보장받게 되었다.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목표, 방향, 인력양성, 현황 및 실태조사에 따른 주요사항을 관장하게 되어있다. 통일교육의 법적 주체는 통일부인 셈이다.

통일부는 통일교육의 정책 수립부터 일선학교의 최종 교육에 이르기 까지 모든 것을 관장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통일부 산하의 통일교육원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들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통일교육 교사들에게 연수를 실시하며, 통일교육의 지침서 및 교재를 발간하여 통일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통일부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시행할 수 없다. 여러 부처의 협조가 공조되어야 효율적으로 교육성과 및 홍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학교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일부와 교육부는 정책 수립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논의 및 협조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부문이 정부주도형으로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단체도 실시하여 정부부분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통일교육지원법 제10조 1항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정부와 민간이 협조하여 통일을 대비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의견이 통일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에서 상이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정부의 역할보다는 민간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

겠다.

III. 한국과 독일의 통일교육 비교

1. 독일 통일(정치²)교육

독일 분단은 전범국에 의한 분단으로 한국의 분단 상황과는 다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의 분단은 한국의 상황과는 다르다. 독일의 경우 전범국으로서 연합군에 의한 강제적으로 분단되었다. 독일 분단은 승전국의 정치적인 의도아래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기 어려웠다. 그러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독일은 ‘통일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했다. 그리고 패전의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패전의 잔재를 지우고, 하루빨리 민주사회를 건설하고, 평화를 정착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은 통일교육이 아닌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을 나누어 실시하였다. 정치교육을 위하여 연방정부는 내무부 산하에 ‘연방정치교육센터’(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가 있고, 주정부는 연방정치교육센터와 비슷한 ‘주 정치교육센터’(La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이 있다. 그리고 각자의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시민대학(Volkshochschule)이 정치교육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의 각 정당이 설립한 정치재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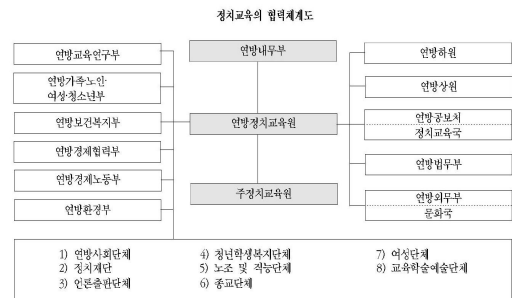


그림 1. 통일(정치)교육의 협력 체계도[2]

2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분단이 이루어져서 ‘통일교육’이라는 명칭을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정치교육’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정치교육은 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 통일교육을 내포하는 포괄적인 개념인데, 우리나라의 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등과 매우 유사하다.

1.1 독일 통일(정치)교육 이념과 목적

독일의 통일이념은 1978년 서독의 11개 주의 교육부장관이 합의 발표한 ‘통일교육기본지침서(Empfehlungen zur Behandlung der deutschen Frage im Unterricht)’에서 시작되었다. 통일교육기본지침서는 서독의 11개 주가 합의한 지침이다. 이 문서는 독일의 통일교육 이념과 목적 등이 자세히 제시되어 있는 기본지침서로서 독일 재통일에 이르기까지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기본지침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이념 및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와 평화이다. 독일은 세계대전을 2번이나 일으킨 전쟁국가라는 불명예가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와 평화라는 전제아래서 통일을 이룩한다는 말이다. 패전국으로 인하여 나라가 분단된 독일은 당장 통일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자유와 평화라는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세계 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은 독일사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착시키고, 패전국인 만큼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둘째, 민족이라는 개념이다. 동·서독이 원래 단일된 민족이고, 국가임을 강조하고 있다. “민족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정당하다. 역사적 유산에 대한 책임은 독일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관계된다. 국경선 양편에 살고 있는 독일인들은 공통된 역사, 언어, 문화를 통해 결속되어 있다. 독일의 국민들은 공동 국가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의 공동 국적을 갖고 있다.”는 민족적 개념과 연대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 개념 하에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국가와 역사의 의미, 민족의 의미에 대해 통일교육을 시행하였다. 독일 민족의 탄생, 역사 등을 통하여 민족적 연대감을 자연스럽게 교육 한 것이다.

정리해보면 통일 전 서독의 통일교육의 핵심이념은 자유, 평화, 민족이다. 즉 서독은 통일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통일 후를 대비하여 민족과 더불어 자유교육, 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보면 서독의 통일교육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3]. 첫째,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의식과 의지를 심어주는 것이다. 둘째,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통일을 이루도록 책임의식과 참여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셋째,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 국가, 즉 동독(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동독인에 대한 의식과 가치관)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넷째, 학생들에게 독일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동독 및 동구권에 거주하고 있는 독일인들에 대한 내적 연대감을 형성해주는 것이다.

1.2 독일 통일(정치)교육 정책

통일교육은 통일정책과 무관하게 전개할 수 없다. 즉 통일 정책은 통일교육정책을 포함하고 방향과 원칙을 제시해 준다. 독일의 통일 정책변화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뉘 볼 수 있다.

첫째, 관계 단절시기이다(1949-1963). 1949년 서독과 동독의 양 국가가 수립되었다. 양 국가는 자신의 정통성만 인정하고 상대방 국가에 대해서는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독만이 독일을 유일하게 대표한다는 주장을 하며,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른바 할슈타인원칙(Hallstein Doktrin)이다. 둘째, 점진적 탐색 단계이다(1963-1969).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서베를린 시장은 통일 정책의 기조로 점진적 접근정책을 추진하였다. 즉 서로를 점진적으로 교류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인적, 물적 교류가 가능하게 되었고, 점진적으로 교류의 시작과 확대가 되었다. 셋째, 협력단계이다(1969-1982). 독일은 사회민주당(SPD)이 집권하면서 통일정책의 큰 변화가 나타난다. 특히 수상인 빌리브란트(Willy Brandt)는 “독일 민족은 하나이나, 독일 땅에 2개의 국가가 존재할 수 있다”는 ‘1민족 2국가론’(Zwei Staaten in einer Nation)을 제기하였다. 이후 2번의 정상회담, 기존의 상대국가 불인정에서, 서로의 국가를 인정하는 기본조약을 체결하였다. 넷째, 활성화단계이다(1982-1989). 기독교민주당(CDU)인 콜 정부는 인적 교류 및 물적 교류의 활성화에 최대한 협력과 노력을 기울였다. 독일은 교류를 통하여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민

죽적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교류가 활성화되고 확대되도록 노력하였다. 요약해보면 서독의 통일정책은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의 역할이 크다. 독일 통일의 초석을 다지고 획기적인 변화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즉 사민당(SPD)의 집권 전에는 서독만이 유일한 독일 내 국가였다. 동독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함에도 따라 통일교육 또한 동독을 비난하고, 체제를 비판하고, 국가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교육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정책 및 교육은 사회민주당(SPD) 집권 이후, 큰 변화를 맞는다. 양 독일 국가의 정상회담 및 기본조약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달라진 환경과 통일 정책은 서로의 체제 불인정과 비난이 아니라 서로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게 되었다. 인적자원과 물질 자원의 교류는 정확한 정보제공이 가장 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양 독일 국가는 인적교류를 통하여 많은 국민들이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비난과 체제 불인정 교육은 불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서독은 객관적 정보와 사실을 전달하고, 비교를 통하여 어떠한 체제가 우월한지 증명하고 보여주어야 노력하였다.

표 1. 서독의 통일 단계 및 내용

단계	시기	내용
1	관계 단절 시기(1946-1963)	할슈타인원칙/상대국 불인정
2	점진적 탐색 시기 (1963-1969)	점진적 교류 (인적/ 물질 교류)
3	협력시기(1969-1982)	상대국 인정/ 정상회담 개최
4	활성화 시기 (1982-1989)	인적·물질 교류 확대

1.3 독일의 시기별 통일교육 과정

독일은 의원내각제 국가이다. 그래서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과 같이 대통령의 통일정책에 따라 통일교육과정의 시기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치교육의 주요목적을 변화단계별로 정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독일의 통일(정치)교육 과정은 1단계 의식화 교육단계, 2단계 철학적·교육적 기초 확립단계, 3단계 정향성 확립단계, 4단계 교육법의 체계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의식화교육단계(1945-49)이다. 민주주의 확립과 통일(정치)교육의 활성화가 강조되었다. 독일은 전범국으로 분단된 국가이다. 그래서 분단극복내지 통일에 대해서는 논할 상황이 아니었다. 즉 통일에 대해서 승전국인 연합군이 논할 상황이지 독일이 논할 내용이 아니었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은 정치교육이라는 포괄적인 내용을 만들어 민주교육, 평화교육, 시민교육, 통일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2단계는 철학적·교육적 기초 확립 단계(1949-64)이다. 통일(정치)교육에 대한 제반 환경을 구성하는 시기이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통일(정치)교육의 기초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1949년 독일 내 동독과 서독의 두 나라가 수립되고, 상대방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서독의 ‘할슈타인 원칙’은 동독을 나라로 인정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교류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였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통일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교육에도 반영되었다. 서독의 교육내용은 독일 내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동독은 국가가 아닌 소련의 괴뢰정부라고 교육시켰다. 더 나아가 통일이 된다면 서독 중심의 흡수통일이 이루어져야한다고 하였다. 3단계는 사회과학적 정향성 확립 단계(1960-70)이다. 과거에 비하여 동·서독의 관계가 호전되자, 통일(정치)교육의 방향과 내용도 수정되었다. 또한 과거 통일(정치)교육에 비해 교수법이 세련되어졌고, 전문교수법이 개발되었으며, 여러 가지 분석이 시도되었다. 1969년 사회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서독의 통일(정치)교육은 동독의 실상을 주관적이 아닌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알리는데 노력하였다. 4단계는 교수법의 체계화단계(1970-85)이다. 이 시기는 독일 분단의 특수성을 알리고, 정치교육이 사례 및 내용의 구체적인 시기이다. 서독은 분단 상황에서 통일(정치)교육도 중요하지만, 유럽공동체내에서의 리더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하면서 교육하였다. 유럽공동체의 민주주의 실현과, 세계시민교육, 그리고 평화교육에 대하여 통일(정치)교육이 역할을 하였다.

표 2. 서독의 시기별 통일(정치) 교육 과정([4]재구성)

단계	시기	주요목적	통일교육내용
1	1945-49	의식화 교육과정	-패전 후 독일의 민주화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정치교육의 체계화 및 활성화 -시민의식함양, 민주적 생활방식 및 문화 창출, 교사의 재교육, 사회 교과서 수정하는 교육 체제 전환
2	1949-64	철학적, 교육적 기초 확립과정	-1946년 정치교육의 기본지침 마련. -1950년 정치교육에 대한 임시법 의결. -1955년 연방정부, 주정부 정치교육에 대한 공동보조 의결. -정치교육이 기본 목표로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고, 기초적인 가치로 확립되던 시기임.
3	1960-70	사회과학적 정향성 확립과정	-사회과학적으로 정치교육에 대한 학문적 수립 및 확립 과정. -정치교육에 대한 교수법 및 사례 등 발전화에 노력함. -정치학, 사회학등 융합으로 정치교육 학문이 체계적으로 수립되는 과정임. 또한 이를 토대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분석 활용함. -정치화의 개념인 갈등과 비판이 정치교육의 중심이 됨. 정치교육은 논쟁을 통하여 발전하였으며, 논쟁이 사고능력의 배양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시킴.
4	1970-85	교수법의 체계화과정	-정치교육의 교수법이 체계화되고 정립됨. -사례교육을 통하여 정치교육 방식을 채택해 나감. -정치해결의 주된 대상이 갈등 해결임. 정치교육은 갈등상황에 대한 논쟁과 공동결정으로 정치적 행위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정치교육의 목적은 사례 학습과 논쟁을 통한 서로의 입장확인하고 갈등 해결 방법 제시, 그리고 이를 통한 지식획득이 정치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됨.

2. 한국의 통일교육

한국 분단은 패전국인 독일 분단과는 상황이 다르게 분단되었다. 일본이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국은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승전국의 이해관계에 얽매어 분단이 되었고, 그 분단은 71년째 지속되고 있다. 한국 통일교육은 긴 분단의 역사만큼 많은 변화를 겪었다.

2.1 한국 통일교육의 이념과 목적

“통일교육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라고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에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밖으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천명한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4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 이념은 미래 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북한관을 정립하는 것이다.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북한관을 정립하는 것이다 [4]. 이 3가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지향적 통일관이다. 미래 지향적 통일관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운데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여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과정이다. 공동체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선 순환되는 구조를 미래지향적 통일교육관으로 제시하였다. 통일 세대가 될 우리 학생들에게 미래지향적이고, 자유민주주의와 민족 정체성 교육은 미래에 필요한 핵심 이념이 될 것이다. 둘째, 건전한 안보관이다. 남북한 군사적 대치상황,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의 체제를 항시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건전한 안보교육이다. 건전한 안보교육이야말로 국가 안보의 기초이고 초석이다. 건전한 안보가 밑바탕에 자리 잡고 그 위에 민족과 화합이라는 두 기둥을 세우고 통일이라는 지붕을 올리는 것이 바로 건전한 안보관의 핵심 이념일 것이다. 셋째, 균형 있는 북한관이다. 균형 있는 북한관은 북한을 바로 이해하고 앞으로 민족공동체로서 통일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더불어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경제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보면 통일교육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평화에 대한 의식과 특정한 안보의식 형성이다. 통일교육은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교육이다. 북한이라는 체제에 대한 안보의식과 북한 국민에 대한 평화의식이 같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둘째, 민주시민의식 함양이다. 통일 후 자유민주주의 체제 중심으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하여 민주시민의식 함양은 중요한 교육이다. 셋째, 북한의 이해와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이다. 북한을 알아야 이해와 소통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이해

와 북한과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함양 되어야 할 것이다.

2.2 한국 통일교육 정책

한국의 통일교육정책은 집권정부의 정책적 판단 상황 따라 변모하였다. 한국의 초대 정부인 이승만 정부는 한반도내 남한의 유일한 정부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북한 무력 통일론을 통일정책으로 추진하였으며, 통일교육으로써 반공교육을 실시하였다. 이후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당의 윤보선정부가 수립된다. 윤보선 정부는 통일정책으로 선(先)건설 후(後)통일을 내세운다. 한국전쟁의 결과로 남한은 산업 경제 시설이 파괴되어 복구가 필요했고, 무엇보다도 북한 보다 못한 남한 경제 사정에서 통일보다는 반공교육에 노력을 쏟았다. 그리고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군사혁명위원회는 윤보선정부의 통일 정책과 통일교육을 이어받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제3공화국의 박정희정부는 1966년 국회 연두교서에서 우리의 지상명제를 조국 통일로 명시하고, 전제 조건으로 ‘선 건설 후 통일’의 정책기조를 분명히 하였다[5]. 그리고 1970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통일구상 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이후 남북 적십자회담과 함께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되었다. 공동 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세 가지 통일 원칙에 합의하였다. 더불어 반공 안보교육에도 힘을 기울였다. 전두환 정부는 1982년 대통령 국경연설에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발표하고 통일은 민족자결원칙에 의하여 민족 전체의 의사가 반영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고 원칙을 밝혔다. 이후 줄곧 이어오던 반공 안보교육이 통일 안보교육으로 변화가 시도된 것이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는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과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통일에 대한 막연한 방안을 구체화 시켰다. 통일의 원칙을 자주·평화·민주를 제시하고,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자유·인권·행복을 보장하는 민주국가를 제시하였다 [6]. 김영삼 정부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기본으로 화해, 협력, 남북연합, 통일 국가의 3단계 협력 과정을 설정하였다. 이후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 한

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여 화해, 협력, 남북연합의 3단계 통일과정과 통일교육을 통하여 통일 방안을 재차 제시하였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햇볕정책 즉 대북포용 정책을 통하여 2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과 원조 수혜대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결과로 남남 갈등도 만만치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 3000’이라고 하여, 북한의 비핵과 더불어 통일 정책을 노력을 하였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고, 남북대화를 통한 신뢰회복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폭침사건 등으로 한반도 정세는 더 이상 우리가 북한을 신뢰할 수 없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하여 남북 관계 정상화에 정책을 주장하였으나, 남측의 일방적이고, 북한의 선 조치 이후 관계회복이므로 관계 회복에 대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등에 대해 남측이 어떠한 대화 통로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승만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 까지 통일정책과 통일교육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시기별 정부의 통일정책과 통일교육

단계	시기	통일정책	통일교육	
관계 단절기	제1공화국 (이승만정부)	북진무력통일론	승공, 반공교육	
	제2공화국 (윤보선정부, 5·16군사정부)	선건설 후통일론	승공, 반공교육	
	제3공화국 (박정희정부)	선건설 후통일론	승공, 반공교육	
탐색단계	제4공화국 (박정희정부)	남북대화,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	반공안보교육	
	제5공화국 (전두환정부)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통일안보교육	
협력 단계	제6공화국	노태우정부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통일 교육
		김영삼정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3단계 3기조	통일 교육
		김대중·노무현정부	민족공동체통일방안/대북 포용정책(햇볕정책)	통일 교육
		이명박정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비핵 개방3000	통일 교육
		박근혜정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한반도신뢰프로세스	통일 교육

2.3 한국의 시기별 통일교육 과정

한국은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권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통일정책과 교육과정이 변화하였다. 한국의 단계별 교육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정부수립과 과도기의 통일 교육단계(1945-60)이다. 정부수립과 제1·2공화국 시기이다. 이 시기는 상대국을 인정하지 않고 반공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의 반공교육은 세계정세에 맞물려 냉전시대를 반영하였다. 4·19혁명 이후 제2공화국은 반공교육과 더불어 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제2공화국은 4·19혁명을 통하여 수립된 정부이므로, 자연스럽게 자유민주주의 교육이 통일교육으로 실시되었다.

2단계는 군부통치기의 통일 교육단계(1961-1987)이다. 제3·4·5공화국 시기이다. 5·16 군사쿠데타로 수립된 3공화국은 반공교육을 국시로 삼았다. 그러나 과거의 반공교육을 뛰어넘어 멸공교육 등으로 한걸음 더 나아갔다. 1960년대 초 2차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교과교육, 반공교육, 특별활동으로 3가지로 나누어서 반공교육을 강화하였다. 이후 ‘반공과 국민윤리’과목이 신설되어 북한의 체제에 대한 비판과 반공개념이 핵심이 되었다. 전두환 정부의 제5공화국은 북한정권의 체제 부정과 더불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체제 비교를 통하여 비판교육을 강화하였다. 이 시대는 안보교육을 통한 통일 교육이었다.

3단계는 민주주의 이행기의 통일 교육단계(1988년 이후)이다. 노태우정부의 제6공화국 이후는 통일교육의 민주주의 이행기이다.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한이 민족 공동체로 인정하고, 기존의 상대국 부정이 변화된 차별된 선언이다. 이후 문민정부는 시민 교육을 강조하면서 민족 통합교육으로 전개되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 햇볕정책을 통하여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을 평화교육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대북 핵문제와 천안함포격 등으로 통일교육이 과거 정부에 비하여 안보중심으로 변화되었다.

표 4. 한국의 시기별 통일교육([7]재구성)

단계	구분	시기	교육이념	목표	내용	형태	정책
1 단계	정부수립 및 과도기	미군정기 (1945-48)	민주시민 양성	국가애 민족애	도미교육	반공교육의 기초 마련	북진통일론
		제1·2 공화국 (1948-60)	민족적 민주주의 교육 민주주의 교육 도미교육	반공정신 함양 반공교육 방일교육	승공 반공 항일교육		
2 단계	군부 통치기	제3공화국 (1961-72)	민족주체성교육, 국민교육헌장제정	반공교육 승공통일	승공통일 반공교육	적극적 반공교육의 강화와 공산주의	선 건설 후 통일론과 8.15 선언의 선언의 경쟁 추진
		제4공화국 (1972-79)	한국적 민주주의 유산적 교육이념	반공교육 멸공교육	국민총화 반공교육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 실시	민족 화합 민주통일방안
		제5공화국 (1980-87)	국민정신 교육	반공교육	체제수호를 위한 이념무장 민주주의 신념 배양		
3 단계	민주주의 이행기	제6공화국 (1988-1993)	국민정신 교육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통일안보 교육	공산주의 비판과 우리체제 우월성 인식	통일교육의 새로운 모습과 통일교육의 비판적 입장의 출현	변혁적 통일운동의 등장과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김영삼정부-박근혜정부까지	민주주의 교육 민주시민 교육 평화교육 안보교육	민족통일 민족공동체 지향	민족공동체 통일대비 교육		시민 통일운동의 활성화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 시사점

통일 전 서독의 통일 정책과 통일교육을 보면 현재의 남·북한 상황과 비슷하다. 동독과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의 사회주의 이념을 강조하고, 서독과 남한은 자본주의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서독과 남한은 자유, 평화, 민주, 민족 등을 통일의 중요 이념으로 삼고 있다. 다만 과거 남한에서 반공교육이 중요이념으로 오랫동안 활용되어왔다는 차이가 있다. 그

러나 서독 또한 1970년 대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통일 정책 전까지는 반공교육이 강조되었다.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체결이후 통일정책과 방향이 평화, 민족, 협력 등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서독의 자유, 민주, 평화, 민족애 등의 통일 이념은 자연스럽게 통일교육에 영향을 미쳤으며, 학교 통일교육은 정치교육이라는 이름아래서 이루어졌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교육은 학교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주정부, 시민단체, 정당 등이 종합적이고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 서독의 이러한 교육은 남한과 같은 분단 상황의 나라에게 통일 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통일 교육의 체계적인 시스템이다. 독일의 통일(정치)교육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정당, 시민단체, 학계 등 여러 기관이 종합적으로 세분화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학생이나 시민 등, 모든 국민들이 항상 접할 수 있는 교육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교육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통일부와 통일교육원이 주축이 되어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의 통일교육은 학교 안에서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시민들은 접하는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되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통일교육의 다양성과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체의 의지에 따라 변하는 교육이 아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중·고등학교 수업 외에 연결선상으로 대학(통일교육 전국대학 교양 필수배정), 직장(성교육시간과 같이 통일교육 의무교육시수 배정, 자격증 취득 시 통일교육 의무 교육시수 배정)을 연결하여 통일교육이 학교수업을 끝으로 중단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행정시스템과 예산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성의 인정”내에서의 통합이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라는 소위 말하는 2번의 진보 정부를 거치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이르기까지 2번의 보수 정부를 맞이하고 있다. 국가의 통일정책 및 통일교육은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정부와 큰 틀에서 180도 다른 통일정책 및 교육은 다시 변화시키기에 시간과 비용 그리고 사고의 전환 등 많은 것이 필요하다.

진보정권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남북 교류의 큰 물줄기로 바라보고 추진하였다. 그러나 보수정권은 2가지 정책을 국민과 의논없이 폐지하였다. 그러나 독일은 사회민주당(SPD)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의 동방정책을 꾸준히 이어져 나가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보이텔스 바흐(Beutelsbach)’³합의를 통하여 최소한의 합의라고 하여 ‘다원성 내에서의 통합’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양국의 갈등과 관계 변화에 대하여 국민들의 거부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정부의 변화에 따라 통일 정책이 자주 바뀌므로 독립적인 가치 ‘국가통일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원회 구성원으로는 통일전문가, 행정부, 국회등이 모여 합의에 의한 일관성있는 통일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통일교육의 통합교육전환이다. 독일은 전범국가로 명의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고, 통합적인 개념인 정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에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통일교육, 민족연대감교육 등,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통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런 교육은 독일국민의 삶과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도 통일교육을 통합교육으로 전환 시킬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이 단순 북한체제를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더불어 통일 후의 시민의식과 민족적 연대감, 세계시민교육, 통일 후 리더 국가되기 위한 조건등 통일 후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발돋움하기 위한 의식교육전환의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55년의 분단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일은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에도 통일(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분단 직후 시행된 통일(정치)교육은 통일 후 국민들의 국가정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내려왔고, 통일(정치)교육은 진화하여 국가 사회구조 요소에 시스템으로 작용하

3 이 협약은 교조주의 금지원칙과 논쟁성 투명화원칙, 배우는 자는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이해관계 상태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세 가지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초 학생에 대한 정치교육의 수업지침으로 채택되었으나, 현재는 모든 독일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독일 정치교육의 헌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고 있다. 더불어 독일 연방은 통일(정치)교육의 창의성, 독창성 등이 국민들에게 거부감 없이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내용이나 제도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독일 통일(정치)교육은 학교통일(정치)교육 외에도 시민교육에 꾸준히 노력하였으며, 연방정부, 주정부, 시민단체, 정당, 학계의 역할이 명확하였다. 중앙정부는 큰 틀의 지침만 제시하고, 주정부는 시민단체와 협력하고, 도움을 요청하였기에 지역에 적합한 통일(정치)교육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통일부 및 통일교육원중심의 교육에서 외연을 확대하여 지역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통일에는 진보와 보수 그리고 학계, 시민단체가 따로 없으므로, 정부, 정당, 학계, 시민단체가 큰 틀에서 합의점을 보고 세부적인 것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과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김정은 정권은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에 비해 지배구조가 많이 취약하다. 김정은은 어린 나이에 후계 수업 없이 정권을 넘겨받았다. 과거 오랜 후계수업 뒤에 정권을 이어받은 아버지 김정일과는 다른 상황이다. 정권의 취약한 구조를 타파하기 위하여 김정은 정권은 잦은 숙청과 미사일 및 핵개발에 모든 동력을 쏟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정부는 강경한 대북 정책보다는 교류와 지원을 통한 통일을 준비해야만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통일의 편익효과와 창출효과를 설명하여 통일의 당위성을 학생과 국민들에게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정당, 전국교육청, 시민단체가 통일에 대하여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고, 역할을 분담하여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는 여러 기관 및 전문가를 모아서 통일에 대한 실제적인 설계도를 맞대어 짜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분야별 기관과 역할을 분담하여, 통일의 건물을 세울 때, 통일이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때까지의 시간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1] 통일부, 통일교육기본지침서, p.11, 2011.
- [2] 박병석, 독일정치교육의미·과제·실행체계, FES Information Series, Friedrich Ebert Stiftung, 2014.
- [3] 김창환, “통일 전 동·서독 학교 통일교육의 이념과 실상,” 한독교육학연구, 제8권, 제1호, p.22, 2003.
- [4] 통일부, 통일교육기본지침서, p.11, 2011.
- [5]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pp.80-81, 2013.
- [6]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pp.83-84, 2013.
- [7] 박찬석, 통일교육의 성립과 과정, 한국학술정보, 2006.
- [8] 황기식,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독일 통일교육과 한국에의 시사점,” 유럽연구, 제33권, 제4호, 2015.

저자 소개

김 용 기(Yong-Ki Kim)

정회원



- 2004년 :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 2016년 :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한서대학교 교양교육원 연구 조교수

<관심분야> : 교육정책, 통일교육